민주 기초長·議員 무공천 "우린 어떡하지?"

대선공약 불구 '공천폐지' 미온적 태도 '눈총'

새누리 재보선 무공천…통합진보도 재논의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존폐 논란을 지렛대로 과감한 정치 혁신 드라이브에 나서기 보다는 기존의 체제 유지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록 비상대책위 사무총장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무공천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회담 제안을 보고했다.

이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는 보완해야할 점이 많은 만큼 당장 다가온 4·24 재보궐 선거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재보궐 선거가 촉박한 상황에서 당장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 의원 및 기초단체장을 공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협의로 미루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보완책과 과감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계기로 전체적인 정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현재의 민주당의 행보는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록 민주당 비대위 사무총장은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와 관련,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좀 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코 앞으로 다가온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 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당이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이라기 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 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당론으로는 일단 반대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일단 이번 4·24 재보선에서 적용되기는 어려울 듯 하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시각도 상당하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민주통합당에 무공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의했다.

한편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당은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3개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보 공천을 중지해 대국민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여당과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기춘 원내대표, 주승용, 이윤석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범주류 당대표 후보들

'컷-오프' 이전 단일화 논의

강기정·이용섭 등 3차례 모임 가능성 타진

김한길 "반혁신적 행태"…추미애 행보 관심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주류 후보 간의 예비경선(컷-오프) 이전 단일화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도 및 주류 진영의 출마 권유가 잇따르고 있는 추미애 의원의 행보가 당권 경쟁 구도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일 민주당 주류 측에 따르면 당권 경쟁 구도에서 비주류 김한길 의원의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주류 후보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각자 살아 나갈 길을 도모) 형국으로 부딪히면 필패 가능성이 크다는 관단에 따라 단일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당장, 범주류 측의 강기정 신계륜 이목희 이용섭 의원은 이미 2차례 회동한 데 이어 3일 3차 모임을 갖고 범주류 연대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혁신 전대, 쇄신 전대를 치르려면 범주류 후보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예비경선 전 단일화가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는 큰 틀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비경선 전 단일화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계륜, 이목희, 이용섭 의원은 컷오프 전 단일화 필요성을 거론하지만 강 의원은 컷-오프 자체가 자연스런 단일화로 가는 과정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에 김한길 의원은 범주류 후보들의 단일화론 자체가 또 다른 계파 패권주의이자 반혁신적인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막강한 계파를 배경으로 하는 분들, 이제까지 당을 장악해왔던 계파의 여러분이 모여서 김한길만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혁신의 이름으로 가장 반 혁신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의원의 행보가 당권 경쟁 구도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김한길 의원에 이어 2위의 지지도를 얻어 김한길 의원에 대적할 카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재근 의원 등 민평련과 친노 진영의 출마 권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추 의원은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4~5일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9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2일 예비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채동욱·윤진숙 내정자 인사청문회

野, 검찰개혁 의지 의문 제기

해수부 '영남 편중인사' 추궁

국회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채 내정자에 대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채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돼있다"고 밝힌 뒤 상설특검제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수사권 충돌이나 갈등이 일절 없도록 조화롭게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난 연말 검란(檢亂) 사태 당시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부하인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야당에 제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제보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왜 야당에 주느냐"면서 "이것이 정의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보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재 미국 보스턴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총장은 "뚱딴지같은 소리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 "이야말로 뚱딴지같은 얘기다. 한 전 총장은 오전에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민주당에 부하 간부의 비리제보를 하고 그날 사퇴했다"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법무부에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 내정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만 해오던 인사로서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신설된 해양수산부 장·차관급은 아예 PK(부산·경남)가 독차지했다"며 '영남 몰빵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농도이자 해양수산 1번지인 전남을 비롯한 호남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농수산업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윤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거세지는 주변국의 해양영토 팽창 시도에 맞서 독도 영유권과 이어도 관할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정치혁신실행위, 당 대표 경선 혁신안 논의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록 사무총장,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과 원혜영, 김진표, 김승남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경선 혁신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내 경선 행사장 앞에서의 피케팅 금지와 후보자들의 지역사무실 방문 금지 의견을 전대준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당내 선거 시 당 대표 출마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최고위원 출마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치혁신실행위는 비대위 산하의 정치혁신위원회와 전대준비위 등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전대준비 및 정치혁신 과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달 말 설치된 기구다.

정치혁신실행위는 간담회 및 세미나와 별도로 주요 정치혁신안을 당헌 및 당규에 반영하는 작업과 중앙당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당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당원을 재등록시키고 당원 번호를 부여하는 등 당원 관리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차기 전남도당위원장 이윤석 의원 추대 전망

차기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위원장에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지역 현역 의원 10명 중 이윤석 의원을 제외한 9명이 현재 당직을 맡고 있거나 도당위원장을 역임해 도당위원장 경선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 의원이 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도당위원장에 관심을 두고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당위원장 직책이 주어지면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 도당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전남지역 예산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